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291-304  
<https://doi.org/10.29212/mh.2019..111.8>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북한사, 북소관계

기광서 저,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이재훈\*

### I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순간 해방이 되었고, 해방된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보기도 전에 한반도의 정체성을 자신의 의지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틈바구니에 끼어들게 되었다. 이후 한반도는 내외부 세력이 복합적으로 참여하여 펼치는 권력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 되었고, 분단을 겪게 되었으며, 중국에는 한반도의 남과 북을 점유한 상처 입은 반쪽 국가들이 열강의 간섭과 지원을 등에 업은 채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비극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해방 이후 벌어졌던 이러한 급격하고 어지러운 변화의 본질은 제2차 세계대전 수행을 위한 연합국들의 전시외교와 종전 후 미국,

---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소련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만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해방이 한국인 자체의 역량이 아닌 외부의 충격, 즉 연합국의 전쟁 수행에 의해 주어진 바가 크고, 해방의 결정적 주체가 종전 후 국제질서 재편을 놓고 세기의 대결을 벌이게 되는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었으며, 한반도와 관련된 양국 정책의 주안점이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 유지하면서 타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는 이른바 패권주의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 한반도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미국과 소련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이제 일본이 퇴장하고 자신들이 그 빈 자리를 채우게 될 동아시아 무대에 대한 앞으로의 영향력 확대와 패권 수립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한반도가 하나의 유의미한 실체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해방, 분할점령과 분단, 전쟁 등 해방 이후 전개되는 총체적 변동을 탐구하는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지배세력인 미국과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본 모습을 규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은 세계 도처의 다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 한반도의 변화를 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연결시켜 가치 있는 많은 연구물을 생산해냈다.

그러한 연구자들 중에서 이 책의 저자인 기광서 교수는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러시아(문서보관소)의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사와 해당 시기 북소관계를 정리하고 규명해 낸, 그리고 현재도 동 분야의 연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이다. 그는 옛 소련이 해체된 이

후 한창 체제전환의 과정을 거치고 있던 1990년대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동방학연구소에서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과 소련의 역할(1945-1947년)」 /Формирова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оль СССР(1945-1947 гг.)이라는 논문을 통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이 책의 말미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북한사와 북소관계를 아우르는 다수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구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 책은 그러한 저자의 연구 성과가 오롯이 녹아들어 있는 역작이다.

## II

저자는 이 책에서 해방 이후 북한정부 수립과 소련군 철군까지 3년여의 기간 동안 어떠한 북소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형성되어갔는지 그 진상을 세밀하게 복원해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방부터 북한 국가 수립까지 북소관계를 정의하는 기존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 진출한 소련군이 주도가 되어 소비에트식 체제를 만들 목적으로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을 ‘꼭두각시’로 내세웠다는 관점이다. 이는 분단의 상황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관점이다. 둘째는 소련의 역할이 북한의 민족적 발전과 국가건설을 위한 원조와 조력에 한정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당연히 옛 소련 측이 내세웠던 선전적 논리이다. 셋째는 북한 측이 주도가 되어 체제 구축과정을 진행하였다는 관점이다. 이는 소련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은 채 혹은 주목하지 못한 채 북한 주도세력의 행동에만 시선을 집중하는 관점이다.

이 책은 이 세 가지 관점 모두를 비판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해방 후 북소관계에서 소련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그 반대로 소련의 일방적 지도가 가능했다고 보는 것도 옳지 못하다.” “북한 국가 형성 과정에서 소련의 주도권이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대소 독립 또는 종속 따위로 나누는 연구모형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요컨대 저자는 해당 시기의 북소관계에 기존의 세 가지 관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저자는 러시아 문서보관소들에 소장되어 있는 해당 시기 북소관계 사료들을 포함한 국내외 자료들을 통하여 해방 후 북한 정치체제에 참여한 정치세력과 소련의 지도부를 추적하고 그들의 활동상을 면밀하게 살펴 보았다.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저자가 주목한 것은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안 작성과정, 북한 헌법제정 경로,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1946년)와 북한 정부의 내각 구성안 작성과정 등과 같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소련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례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저자는 북한 측과 소련 지도부를 정책적 행위의 “공동주체”로 규정하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게 되었다. 요컨대 “북한 체제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소련의 지도적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그 역할을 규정지은 것은 소련과 남북 공산당의 상호작용”이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공동의 행위주체란 상호 동등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지만, 양자 간에 상호의존도가 높은 관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모스크바 결정, 토지개혁, 군대 조직, 헌법 제정 등 북한 국가 수립 과정의 주요 국면들에 이러한 (공동행위주체의) 구조들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북소)

양측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일치”했고 “해방 이후 북한 정부 수립까지 소련과 북한 지도부는 단순한 물리적 협력관계 이상으로 내적인 결합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자는 두 가지의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이 애초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이른바 분단 책임론의 문제이다. 사실 한반도 분단 책임론과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훈령을 통하여 “북조선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власть) 수립에 방조할 것”이라고 지시한 대목을 근거로 소련 측이 애초부터 분단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1946년 6월 “남방만이 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분단국가 수립의 첫걸음이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의 경향도 존재한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과 소련, 좌와 우, 어느 쪽이 먼저 분단을 추구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모든 당사자들이 자기 세력이 우위에 선 단일국가 수립을 원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해방 직후 미소와 한반도의 정치세력들이 자기주도의 단일국가 수립을 추구하였고, 남북한의 어떠한 정치세력도 처음부터 분단국가의 수립을 기도하지는 않았으며, 분단국가의 출현은 자기 주도의 한반도 단일정부 수립을 위한 모든 세력의 기대가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위를 통해 수포로 돌아간 결과이기 때문에 분단의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인식체계에 적지 않은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주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자의 글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저자가 왜 이러한 관점을 제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바가 아니다. 저자는 이 관점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1945년 9월 20일

자 스탈린의 훈령을 북한 분단국가 수립의 시초로 정의하고, 이후의 정치 과정을 이 행보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 서술하고 해석함으로써 북한정치사 연구의 기본 구성틀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자 하는 듯하다. 미소공위 결렬 이전에는 미소를 비롯한 남북 양 진영 공히 분단국가 수립의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는 저자의 판단이나 1945년 9월 20일 스탈린 훈령의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이 가지는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한 항변은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스탈린의 훈령이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건 혹은 미국과 소련,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의도했던 다른 무엇이건 한반도에 실제로 발생한 분단을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의 주체와 상황은 당연히 있는 것이며, 이를 찾아내고 알리는 것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감당해야 할 숙제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은 북한사에 대한 파벌투쟁적 접근을 지양하는 것이다. 파벌 간의 권력투쟁을 북한사의 중심에 놓고 서술하는 기존의 북한사 연구 경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북한사 서술의 모순적이고 단선적인 구조로부터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좌우세력의 대립 속에서 정치적 역동성이 뚜렷했던 남한과는 달리 공산당(노동당)이라는 사실상의 독점적 정당 구조 내에서 대립보다는 협력과 엄격한 이념적 규율에 입각한 노선 경쟁을 주요한 특성으로 하는 북한의 정치사를 보다 진실에 가깝게 복원해 내하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파벌을 “정당 내에서 주도권 획득과 같은 특정한 이익을 위해 결합한 분파”로 정의하면서 해방 이후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이러한 규정에 묶어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해방 초기부터 북한 국가수립 시까지 ‘빨치산계’,

‘국내계’, ‘연안계’, ‘소련계’<sup>1)</sup> 등 4개의 계열 간에 자기만의 이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의 인적 관계가 상호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세력이 분화되어 파벌을 형성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있었던 1920년대의 분파투쟁과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종파투쟁을 보는 시각이 해당 주제의 연구에 가져다 준 부정적 의미를 익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초기 북한사에 대한 파벌투쟁적 시각으로의 접근이 꺼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중첩적인 정치 과정이 권력투쟁이라는 단선적이고 정형화된 틀을 통해 왜곡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릇 정치란 권력투쟁을 그 본질로 하고 있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외부 집단을 상대로 한 투쟁 뿐 아니라 내부 집단들 사이에도 거의 예외 없이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초기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위의 4개 집단이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듯이 “정치적 이익에 입각한 조직구성이라기보다는 출신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른 것뿐일지라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4개 집단 각자에게 형성된 내적 유대의식과 고유한 특성화는 각자의 집단을 초월하는 공통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언제이건 노출될 수 있는 표상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물론 기우이겠지만, 해당 시기 북한 지도부 내 내부 집단들의 존재와 그 내부 집단 간의 투쟁이 다른 모든 현상에 우선하여 논의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무시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저자는 연구자들이 해방 초기 북한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들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식인 ‘빨치산파(만주파)’,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이 책에 ‘빨치산계’, ‘국내계’, ‘연안계’, ‘소련계’ 등의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 III

이 책은 모두 6개의 장과 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해방 전 소련의 대한정책과 국내외 운동세력’에서는 해방 이전 소련이 한반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와 그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구상을 분석하고, 빨치산 그룹을 비롯한 조선 정치세력의 동향에 대하여 살피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해방 전 소련의 대한반도정책과 관련하여 “대일전 참전이 결정된 알타협약 이전에는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소련의 전통적 이해관계와 전후 극동정책 수행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소련의 개입 의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구체화되었던 소련의 대한반도정책 기본 목표가 “어느 열강이든 독점적인 지위를 배제하며, 독립된 조선과 반드시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빨치산 그룹을 비롯한 조선 정치세력의 동향 부분에서는 장차 북한의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김일성그룹을 비롯한 국내외 한인 정치세력의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그룹에 대해서는 러시아 자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여 1940년 동 그룹의 소련 영내 이동부터 해방 직전까지의 활동 및 상황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저자는 소련의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김일성그룹은 중요한 지원세력인 것은 틀림없지만 다른 공산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이 자신이 지지하는 김일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공산주의자들을 소외시켰다는 전통적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2장 ‘해방과 정치체제의 태동’에서는 해방 직후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초기 정책, 공산당을 비롯한 각 정치세력의 활동, 행



정체계의 성립 등을 다루고 있다. 우선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초기 정책 부분에서는 과거 소련에서 발간된 관련 책자들을 주로 인용하여 소련군의 북한 내 전투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소련의 북한 진주 초기 정책을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와의 관계, 대북한정책의 기본 지침인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 수립’ 노선 등과 연관시켜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 수립’을 북한에 이른바 분단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지시로 이해하는 학계 일각의 시각을 논박하면서, 이를 소련이 “북한 내 좌우 연대를 통해 소련에 우호적인 권력기관을 수립하여 자신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서 ‘친소적’ 기반을 공고히 한 다음 전국적인 정부 수립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복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산당을 비롯한 각 정치세력의 활동 부분에서는 장차 북한 국가 수립의 주축이 되는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북한 내 김일성의 입지를 그의 귀국 후 활동 및 다른 지도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시기 박헌영과 김일성의 양자관계가 “알력과 견제보다는 협력적 색채에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체계의 성립 부분에서는 북소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해방 초에 개시된 정권기관과 당, 그리고 무력의 조직화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관련 자료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 모든 조직화 과정에서 “소련군 지도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쪽과 공동으로 사전 의견 조율을 거친 관계로 일방적일 수 없었다”는 자신의 관점을 입증하고 있다.

제3장 ‘정책의 전환과 변화의 동력’에서는 모스크바 결정과 북한 정세의 변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토지개혁 등을 다루고 있다. 우선 한반도 운명의 변곡점이 된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소련의 입장과 수행한 역할,

결정 직후 북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모스크바삼상회의 이전 소련의 한반도 구상에서 가장 일관되고 핵심적인 내용은 조선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이었지, 신탁통치(혹은 후견)의 실시는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5년 동안의 “탁치 실시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를 합의”해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이후 신탁통치 정국 하에서 북한의 ‘민주기지론’이 제기되는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조만식그룹의 이탈이 가져온 정국의 급변이 중앙정권기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회경제 구조를 뒤바꾼 토지개혁에 대하여 공산지도부의 구상으로부터 최종안의 도출을 위한 경로, 개혁의 실행 결과를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토지개혁을 민주기지 강화 정책의 구체적 실천단계 중 하나로 보고 민주기지 강화와 관련하여 대다수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토지 문제의 해결, 즉 토지개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4장 ‘타협과 독자적 발전의 길’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의 대미 협상전략과 제1차 미소공위 이후 소련의 정책 변화, 주도세력의 연합과 강화 일환으로서의 북조선노동당의 결성, 권력의 정통성 확보를 의도한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와 북조선인민위원회 창설 등을 다루고 있다. 우선 미소공위와 관련하여 소련대표단에 하달된 훈령들과 미소 협상에서 제시된 소련 측 안을 토대로 소련의 전략과 정책을 규명하고,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민주개혁을 포함한 주요 정치적 국면의 검토를 통하여 북한 정국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러시아 사료를 통해 미소공위에서 소련 측의 일관된 입장이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조선인들이 반소, 반공적이 돼서는 안 되며 ..... 소련의 이해관계에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련

측이 미소공위의 결렬을 실패로 보지 않고, 아예 “공위에서 반동 세력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을 승리”로 간주하였음을 밝혀내고 있으며,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공산측이 미국과 남한 우파세력과의 “타협이나 협상보다는 ..... 북한의 민주근거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 일환으로 노동법령, 남녀 평등권법령, 주요산업 국유화법령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변화 가운데 주도세력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단행된 북로당의 결성 배경과 조직 구조, 지도체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러시아 사료를 근거로 북한 내 공산당과 신민당의 노동당으로의 합당이 스탈린의 권유에 따른 것임을 밝히면서, 합당의 이유로는 “한반도 차원에서 공산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당의 색채를 완화해서라도 좌파의 단결뿐 아니라 여타 세력과의 통일전선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력기관의 임시성을 제거하고 적법성을 붙여넣고자 실시한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의 추진 과정 및 선거 상황을 규명하고, 임시인위가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조되는데 따른 조직적 변화와 이 기관의 독자적 권한 확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공산 측이 분단의 고착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독자선거와 권력의 합법화에 나선 이유와 관련하여 ‘확보된 지역에서 사회주의 굳히기’라는 전통주의적 주장을 반박하면서, 북한 지역을 정치경제적으로 강화시켜 전 한반도 차원의 혁명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북조선 민주기지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5장 ‘내부 체계의 정비와 제2차 미소 협상’에서는 남북, 북소 주도세력들의 상호작용과 북한 내 권력구도의 변화, 제2차 미소공위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우선 주도세력들의 상호작용

부분에서 저자는 내부 지도체계 정비과정에서의 남북과 북소 공산주의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북한 내 권력구도, 소련 민정체계의 개편 등에 대하여 규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제2차 미소공위의 재개 준비와 전개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소공위 재개에 즈음한 소련 측의 새로운 전략과 공위 과정에서 이의 실현을 위한 시도를 살펴보고, 공위 사업의 결렬 원인과 소련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6장 ‘정부 수립의 여정’에서는 분단정부 수립을 대비하는 모습, 통일과 분단의 갈림길로서의 남북연석회의, 북한의 헌법, 최고인민회의 선거, 북한정부의 수립과 소련군 철수 등을 다루고 있다. 우선 저자는 분단정부 수립을 대비하는 모습의 하나로 공산 측이 가지고 있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해방 직후 진행된 무력 조직이 국가 수립의 물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인민군의 창설로 이어지는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연석회의 부분에서 저자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분단을 저지할 목적으로 소집된 것에 의미를 두고 고찰하는 경향성을 뛰어넘어 이것이 실패할 경우 공산 측 지도부가 그런 구체적인 구상과 설계도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연석회의를 치르면서 공산 측은 통일정부의 굴레에서 벗어나 ‘반동세력’과 함께하는 통일정부 보다는 자국에 우호적인 분단정부를 선호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어서 분단정부의 수립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북한의 헌법 제정 부분에서는 헌법의 초안 작성부터 제정까지를 둘러싼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그 과정이 “밑에서부터 소련공산당 정치국에 이르기까지 입장을 개진할 만큼 복잡한 경로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북한정부의 수립 부분에서는 북한 국가 수립의 최종단계로서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된 조선최

고인민회의 선거의 준비와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남쪽 ‘지하선거’의 실체를 조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북한 정부의 조직적 구성과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

보론 ‘소련의 대한반도-북한 정책 관련 기관 및 인적 구성’에서는 해당 시기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조직이었던 당 중앙위원회 기관, 외무성, 무력성, 연해주군관구, 제25군 사령부 및 민정부(민정국), 경무사령부 등의 구조와 역할, 관련 인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 IV

국내의 일반 연구자들에게 북한사, 북소관계 관련 러시아 자료가 알려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이다. 몇몇 연구자들이 극히 기본적인 정보만을 가진 채 러시아의 문서보관소들을 찾고 자료를 발굴해서 국내에 소개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국내로 반입된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러시아연방 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ЦАМОРФ)’와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Ф)’,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때 들어온 자료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책자의 형태로 발간되어 일반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개별 논문들에 이따금씩 모습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 문서자료가 해방 이후 한반도와 북한의 상황과 그에 대한 소련의 정책을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서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문헌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도 이 책은 가치가 있다.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해당 시기 자료 거의 전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의 진

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실로 탄생하였기에 그렇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때때로 새로움을 넘어 곤혹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을 듯하다. 왜냐하면 러시아 문헌 자료들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보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타인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불편함과 당혹감을 느낀다. 냉전의 상대측이었던 소련/러시아의 자료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이었고, 현재도 많은 부분 타인의 시선일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